



‘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’ 실현

시설공단 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” 없앤다
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공단 전부서의 정책, 사업 계획 수립 시 ‘사전 검토항목’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.

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 제도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참여, 유관기관 협의, 안전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등 총 9개 사항 사전검토를 실시하며, ‘사전 검토항목’은 공단 모든 결재문서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며 주민참여,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취약계층, 고용효과, 전문가 자문

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, 담당자와 추진부서에서 스스로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반발이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주민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 전환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